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충남·전북 어업인과 논의한다

-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충남·전북에서 개최
-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목)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이하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①전남, ②제주, ③충남·전북, ④강원·경북·울산, ⑤경기·인천, ⑥부산·경남

3월 6일(목) 제주도에에서 개최한 두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여 제주도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품종과 바다숲 도입, 해녀들의 해조류 자원 보호 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포럼 지역인 충남·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전북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어종으로 여겨지지 않던 살오징어·삼치·멸치 등이 해당 해역으로 확대·이동하고 있어 어업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현장의 피해 예방은 물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전북에 이어 3월 중에는 동해안의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에는 경기·인천, 부산·경남 지역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충남·전북 지역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510)
	어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진우 (044-200-5514)

